

보도시점

2026. 7. 20.(월)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6. 7. 20.(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위한 논의 이어가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관련 주요 쟁점 추가 검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0일(월)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올해는 현행 산정방식의 적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7년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마련하는 해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78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관련한 기존 쟁점을 논의하는 한편, 소득 통계의 급격한 변화와 시차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산정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후속 논의를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7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많은 복지제도의 지원 수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며, “논의된 쟁점을 폭넓게 검토하여, 정해진 일정 안에 합리적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을 제시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기준 중위소득 개요

담당 부서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박민정 (044-202-3050)
		담당자	서기관	이웅채 (044-202-3066)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구 성**

- 위원장 포함 16인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6인):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 및 국토교통부 · 교육부 · 기획예산처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차관
 - 위촉직(10인): 전문가(5인), 공익을 대표하는 자(5인)

□ **위원회 기능 및 역할**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 심의·의결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구 분		성 명	현소속 및 직위
당연직		정 은 경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김 이 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최 은 옥	교육부 차관
		(공 석)	기획예산처 차관
		김 민 재	행정안전부 차관
		권 창 준	고용노동부 차관
위촉직	전문가	석 재 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 태 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 현 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
		박 미 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성 식	서울교육대학교 부총장
	공익	송 인 규	법무법인 정원 대표 변호사
		김 도 형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조 상 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수 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 현 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 (개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 現 산정방식('21년~'26년)

- (원칙)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

$$n\text{년 기준 중위소득} = n-1\text{년 기준 중위소득} \times (1+\text{기본증가율}) \times (1+\text{추가증가율})$$

* 추가증가율은 6년간 ('21~'26) 한시 적용

- (기본증가율) 최근 3년(n-3~n-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

※ 다만, 차년도(n년)나 당년도(n-1년)에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증가율의 3년 평균치를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한다.

- (추가증가율) ①기준 중위소득-가금복 간 격차 해소, ②개편된 가구균등화 지수 반영을 위해 6년간('21~'26) 한시적으로 추가증가율 적용

- (통계원 변경) '21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및 증가율을 산출할 가구소득 자료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개편('20.7월, 제60차 중생보 결정)

- (격차 해소) 통계원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간 격차('18 기준 12.49%) 단계적 해소(6년간)

* $(n-3\text{년 가금복 중위소득} / n-3\text{년 기준 중위소득})^{1/6}$

- (가구균등화 지수) 1·2인 가구 보장을 강화하는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지수 0.37 → 0.4 / 2인 가구 0.63 → 0.65 등

** 격차 해소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균등화 지수도 6년간 단계적 변경